

아침세평

박병진

금구초 교장·교육학박사



그동안 설마설마했는데 갑자기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하나가 돼버렸다.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지만, 이미 통합이 결정된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변화를 지역 교육의 발전으로 이어갈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통합교육청이 출범하면 광주와 전남을 아우르는 단일 교육행정 체제가 만들어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한 명의 통합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행정 조직이 합쳐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육의 구조와 운영 방식이 크게 바뀌는 일이다. 그만큼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 통합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아무래도 교직원 인사와 근무지 배치다. 광주와 전남은 생활환경과 교육 여건이 상당히 다르다. 통합교육청이 출범하면 광주 지역 교직원들이 전남 도서벽지 지역으로 발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장에서는 불안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과거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결국 통합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교직 사회의 불안이 커지면 교육 현장의 안정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 교육통합, 갈등을 넘어 해법 찾을 때

교육격차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다. 통합을 통해 광주와 전남의 교육 자원과 정책을 함께 활용하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광주의 교육 인프라와 전남의 다양한 교육 환경이 보완된다면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책과 예산이 도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농어촌 지역 교육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합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걱정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학교 교육이 일정 기간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걱정도 적지 않다. 광주 교육정책과 전남 교육정책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정책 방향이나 행정 방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선출되는 통합교육감의 정책 방향에 따라 어느 한 지역의 교육정책이 급격히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화가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문제 제기는 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통합이 이미 결정된 이상 이제는 서로의 걱정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의 자치와 균형 발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특례가 마련돼야 한다. 통합 이후 일정 기간 농어촌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교육청의 준비 역시 매우 중요하다. 통합교육청은 거대

한 관료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행정 조직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 이후의 행정 구조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직원의 인사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명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역 인사 이동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마련하고, 일정 기간 기존 근무지와 경력을 보장하는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 시민,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교육 통합은 행정 조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공론화와 속의 과정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교육 정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와 전남은 오랫동안 역사와 생활권을 공유해 온 공동체다.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서 일하고 전남에서 생활하며 서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 역시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발전시켜야 할 공동의 과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통합의 내용이다.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통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새로 선출되는 통합교육감 역시 교육통합을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갈등과 우려 속에서 시작된 통합이지만, 준비와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광주와 전남 교육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통합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고

정성욱

목포농협 융해지점장



새로운 희망을 품고 2026년 문을 열었다. 해마다 맞는 새해이지만, 올해의 시작은 유난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우리는 다시금 일상의 소중함을 돌아보고, 그 일상을 지탱해 온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와 폭설로 농촌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무겁다. 농사 걱정이 앞서지만, 그럼에도 더 부지런히 땅을 살피고 마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한다. 이 같은 겨울의 풍경은 단지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겨울이기도 하다.

추운 겨울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절실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의 위기다.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며, 농촌과 소도시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을 살리자는 새로운 접근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납입한 기부금은 지역의 복지 확

고향사랑기부금, 농촌의 미래가 된다

대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연결된다. 농촌이 살아나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그 결과 지자체의 재정 기반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을 다시 숨 쉬게 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지역 특산품을 중심으로 한 답례품이 제공된다. 이는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또 다른 효과를 만들어 낸다. 기부와 소비, 응원과 보상이 연결된 이 구조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단순한 재정 확보 이상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공동체 붕괴라는 '지방 소멸'의 위기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농촌이 사라진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식량, 환경, 문화의 기반 또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제도의 출발점이었다.

제도 시행 이후 3년째를 맞이한 지금, 그 성과는 수치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1515억원에 달했으며, 첫해인 2023년 651억원 대비 약 130%, 2024년 879억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개별 지자체의 성과도 눈에 띈다. 광주 남구는 71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대비 약 16배 증가한 수치였다. 이러한 성과는 특정 지역만의 사례가 아니다. 전국에서 고향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부금은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청년·체육·문화 사업, 복지 서비스 확대,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2026년은 단순히 달력만 한 장 넘어야 할 해가 아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추운 겨울은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우지만, 동시에 따뜻함의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하는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잇는 일이자, 세대가 이어지는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선택이며, 우리 아이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공간을 지켜내는 약속이다.

이제는 '어디가 더 많은 혜택을 주는가'를 따지는 기부가 아니라, '어디를 응원하고 싶은가'를 고민하는 기부로 나아가야 할 때다. 기부자가 선택한 도시가 아니라, 기부자가 마음으로 응원한 공동체가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투지이며, 제도가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다. 2026년, 더 많은 국민이 고향을 향한 사랑과 응원의 마음으로 이 제도에 동참할 때, 대한민국 곳곳의 마을과 도시에는 다시 온기가 돌 것이다. 우리가 기부로써 기억하게 될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삶과 희망일 것이다.

지금, 당신의 작은 손길이 대한민국 지역 곳곳의 내일을 밝히는 첫 불꽃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취재수첩

왜 여전히 '광주·전남'일까

이승훈

경제부 부장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특별시를 두고 요즘 지역사회에서 묘한 장면이 반복된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누군가는 '광주·전남'이라 하고, 또 누군가는 '전남·광주'라고 말한다. 행정 통합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이름을 부르는 방식부터 제각각이다.

공식 명칭은 이미 정해졌다. '전남광주특별시'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광주전남특별시'와 '전남광주특별시'를 두고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전남을 앞세운 이름

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여전히 '광주·전남'이다.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표현이기도 하고, 일상 언어에서도 자연스럽게 굳어진 순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는 약칭이다. 공식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지만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해졌다. 행정 효율성과 도시 브랜드 인지도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이름 앞에 '전남'이 붙어 있음에도 실제로 불릴 이름은 '광주'가 되는 셈이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긴다. 통합 도시의 이름은 '전남광주특별시'인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광주·전남'이라고 부를까.

이유는 단순하다. 이름은 행정이 정하지만 언어는 사람들이 만든다. 수십 년 동안 입에 붙은 표현은 쉽게 바

뀌지 않는다. 수도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울·경기'라고 말하듯, 광주와 전남 역시 생활 속에서는 '광주·전남'이라는 순서가 익숙해져 왔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말버릇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명칭의 순서는 상징이 된다. 어느 지역이 앞에 오느냐는 지역 정체성과 자존심의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이름을 정하는 일은 늘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였다.

이번 통합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름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 생활 속 표현은 '광주·전남'이다. 행정 명칭과 약칭, 생활 언어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름 하나로 통합의 성패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행정 통합의 본질은 산업과 경제, 생활권을 묶어 더 큰 경쟁력을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이름은 도시의 첫 얼굴이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곧 현실이 된다. 사람들이 이곳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게 될지, 어쩌면 통합의 진짜 시험대는 그때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

사설

국가 AI컴퓨팅센터, 차질없이 추진돼야

해남 솔라시도에 조성되는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사업(이하 AI컴퓨팅센터)이 속도를 내게 됐다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SDS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과기부부가 이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AI컴퓨팅센터 건립사업은 본격화된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2조9000억원을 투입, 국가 차원의 국내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핵심 연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먼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규모의 AI 연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충해 오는 2030년 GPU 5만장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연산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여기서 GPU는 데이터를 한 번에 대량으로 처리하는 병렬 처리 방식 반도체를 말하는 데 게임·영상 편집 등 멀티미디어 작업에서 중앙처리장치(CPU)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현재는 AI의 핵심 부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 예측, 암호 해독 등의 분야와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등 미래 산업에서도 사용되는 등 그 수요 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AI 서비스, 데이터센터,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대규모 AI 학습, 생성형 AI 등 첨단 AI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핵심 기반이 GPU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AI컴퓨팅센터는 국내 AI 반도체 기술을 실제 데이터센터 환경에 활용하는 등 AI 연구 개발을 뒷받침할 '국가 AI 두뇌'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AI 연구개발 역량 강화는 물론 관련 기업 유치와 전문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해남군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라는 한편 지역산업과 인재 양성, 신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연계 전략도 마련키로 했다.

광주·전남이 국가 첨단산업 중심지이자 'AI·에너지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

동구 총장상권 르네상스, 구도심 활력졌다

광주 동구의 '총장상권 활성화 르네상스 사업'이 지역 상권 체질을 개선하며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인 이 사업을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1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2022년부터 총장로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총장라운 페스타'다.

이는 '즐거움'의 순 우리말 '라운'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평균 2개월에 한 번 이상 선보여 상권 내 방문객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4년간 총 28회 진행해 누적 관람객 12만9000여명, 총 21억2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나름 성과를 거뒀다.

또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빈 점포를 리모델링한 신개념 체험형 관광안내소 '총장의집(ZIP)'과 2024년 문을 연 K-POP 팬덤 문화와 연계해 MZ세대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K-POP 공유카페'도 상권 활성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들 공간 역시 지난해까지 2년간 누적 방문객 2만5000여명, 3억 5000여만원의 매출 기여 효과를 보인 것이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총장로 일대에 조성한 이색테마거리 '홍콩 골목'도 큰 인기다.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던 점포들을 리모델링해 선술집과 포차, 위스키 바, 사브사브 전문점 등을 집적화한 이곳은 네온사인과 간판이 화려하게 빛나는 '야경맛집'으로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인종상 명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덕분에 개장 3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5만여명과 매출액 10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있다.

그동안 사업 예산이 시설 설치 등보다는 행사·교육 등 프로그램에 집중, 율 언발 사업 종료 후에도 상권 활성화가 그대로 유지될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총장상권이 사업 종료후에도 명실상부한 광주 대표 상권이 될 수 있게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경 제 부 370-7020 산 업 부 370-701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는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52(일간)	독자관리국 370-7080 사 진 부 370-705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